

# 여 “노동가치 존중받는 사회”…야 “반노동 정책 전환”

국힘 “국민체감 노동정책 마련”  
민주 “실질적 노동기본권 보장”  
尹 “소중한 노동의 가치 보호”

국민의힘은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총선 민의를 받아들여, 반(反) 노동 정책을 전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노동자들이 흘린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노동

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 여건을 만드는 것은 우리 정치권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일 것”이라고 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3대 개혁’에 노동을 포함시키며 최우선 국정과제 삼으며, 진정한 땀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위한 정책 마련에 힘을 쏟아왔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이에 지난해 10월 노조회계 공시 제도를 도입하며 그간 거대 노조의 강성 파업·회계 비공개·고용 세습·노노(勞勞) 간 착취 등 비상식적 특권과 불법행위가 만연했던 상황에서 벗어나 발전적 노사관계로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땀의 가치가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정 세력들에게

만 이익이 독점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비노조·저임금 노동자 등 노동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노동 정책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예고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이 최빈국에서 세계 경제강국으로 도약하는 데는 노동자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다”며 “그 노고와 헌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어 온 노동자들의 자부심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반노동 정책으로 노동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정부는 카르텔의 낙인을 찍어 노조를 탄압하고,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가로막았다”며

“주 69시간제를 추진해 노동자의 삶을 망가뜨리려 했고,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도들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청년들의 일자리는 줄어만 가고, 노동자들의 살림살이만 나빠지지만 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노동자의 행복한 삶이 곧 민생”이라며 “민주당은 노동자들이 흘린 땀 한 방울, 한 방울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되고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주 4.5일제 지원, 포괄임금제 금지 명문화, 실질적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반드시 보호할 것”이

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노동은 개인의 자유와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동시에, 우리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고 썼다.

이어 “대한민국이 지금의 눈부신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근로자 여러분의 땀과 노력 덕분”이라며 “2840만 근로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반드시 보호할 것”이라며 “근로자 여러분의 일터를 더욱 안전하고 공정하게 만들고, 노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근로자 여러분, 힘내십시오!”라고 덧붙였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 여야, 17일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야가 오는 17일 오동운 공수처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

법사위는 오는 7일 오후 2시 오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17일 오전 10시 인사청문회를 연다.

민주당은 오 후보자의 ‘박근혜 정부 정보경찰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과 미성년자 성폭행법 변호 이력 등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후보자 중립성과 공정성 자질 검증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오 후보

자를 2기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했다.

오 후보자는 1998년부터 2017년 변호사 개업 전까지 20년 가까이 판사 생활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등을 거쳐 울산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부장판사로 일했다. 현재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로 있으며 동시에 성동세무서 국제심사위원, 인천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오 후보자는 앞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

## 광주시, ‘X자형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확대

광주시가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고 걷기 좋은 보행환경을 위해 대각선 횡단보도를 확대한다.

광주시는 광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의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동구 산수문화마당사거리 등 19곳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했다고 1일 밝혔다.

광주시는 대각선 횡단보도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높고,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어 올해 25곳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또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대각선 횡단보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대각선 방향을 포함해 모든 방향으로 보행자 횡단이 가능하다. 보행자의 교차로 횡단 횟수를 1회

로 단축하고, 모든 방향의 보행 녹색신호를 켜줌으로써 차량의 진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보행 안전과 편의를 모두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입증됐다.

도로교통공단의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효과 연구(2018년)’에 따르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구간에서 우회전 때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일반도로에서는 25%,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절반 가까이 줄어 교통사고 경감 효과가 높은 것으로 입증됐다.

광주시는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위해 횡단보도와 신호등의 위치를 조정하는 한편 노후화한 신호기는 신규 교체하는 등 교차로 주변 교통시설물과 안전시설물을 정비한다.

최권범 기자

## 전남도 “올해 여순사건 사실조사 5천건 완료”

전남도는 전국 여순사건 유족을 대상으로 여순사건 유족 업무 현황 설명회를 지난달 30일 동부청사에서 개최, 올해 5000건의 사실조사 완료를 목표로 심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설명회는 전국에서 유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여순사건 실무위원회가 추진한 일과 앞으로의 업무를 설명하고, 유족의 애로사항 청취 및 소통 시간으로 진행됐다.

설명회에선 김용덕 여순사건지원담당관이 여순사건 분야별 업무 현황과 신속한 진실규명을 위한 실무위원회 차원의 향후

계획을 유족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했다. 참석자 질의를 통해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열띤 토론의 시간도 가졌다.

이어 송영진 여순사건중앙위원회 조사조사과장이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될 진화위 희생자의 여순사건 희생자 직권결정 절차와 이에 따른 신속한 희생자-유족 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행사는 올해 전남도가 유족 편의를 위해 도입한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관리 시스템 사용 설명으로 마무리됐다.

곽지혜 기자



박주민-이양수,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합의사항 발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양수(왼쪽)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합의사항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1면 뉴스

## 광주 무연고자 등 복지장례 지원조례안 상임위 통과

### 신수정 시의원 대표 발의

광주시의회는 신수정 의원(북구3·더불어민주당·사진)이 대표 발의한 무연고자·저소득층 장례 지원을 위한 복지장례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 등이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례안은 복지장례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복지장례 지원 대상자 및 지원 방법, 지원신청 절차를 규정했다. 또 공설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연고자와 저소득층 사망자 등의 장례 의식에 우선으로 이용하도록 했다.

최근 3년 간 광주시 무연고 사망자는 2021년 44명, 2022년 57명, 2023년 90

명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독거노인 수 역시 2021년 6만1263명, 2022년 6만5616명, 2023년 7만449명으로 증가했다.

신 의원은 “타 지자체의 공영장례가 아닌 복지장례로 명명해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표현되는 보편적 복지 정책을 구현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소의된 이웃의 마지막 여정에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고 완전한 광주다움통합돌봄이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 전남도,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추천 대상 모집

전남도가 오는 12월20일까지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도지사 추천 대상자를 모집한다.

법무부의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에 따른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사업’은 국내에서 장기간 근무해 숙련도가 축적된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를 장기 체류가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단순노무 분야 외국인 근로자(E-9, E

-10, H-2)는 최대 4년10개월 체류 하고 본국으로 출국 후 재입국해야 하지만, 숙련기능인력의 경우 출국하지 않고 비자 연장이 가능하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초청할 수도 있다.

숙련기능인력 전환은 국내 체류 기간, 최근 2년간 평균소득, 한국어능력, 나이를 구간별로 점수화해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일 경우 가능하다. 도지사의 추천을 받으면 가점 30점이 부여되므로 점수가 170점 이상 200점 미만일 경우 도지사 추천을 활용해 비자를 전환할 수 있다.

비자 전환을 위한 요건은 △최근 10년간 E-9, E-10, H-2 비자로 4년 이상 국내 체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간 근로계약 체결 △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 취득이다.

올해 전남도 추천 인원은 308명이다. 시·군별 배정 없이 수시로 선착순으로 추천 대상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숙련기능인력 전환 대상 외국인 중 도지사 추천 가점이 필요한 외국인은 기업 소재지 시군 외국인업무담당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비자 전환을 위한 상세 요건과 각 시군 담당 부서 연락처는 전남도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곽지혜 기자